

# 민주 “23일 양곡법 개정안 처리”... 입장차 여전

## 김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국힘 “의무 매입은 안돼”  
민주 “尹 거부권에 목매”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의무매입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기다리며 중재나 타협을 전혀 구상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확고히 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양곡관리법에 관해 의장께서는 양당이 좀 더 의견을 좁혀 합의 처리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기존 약속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저희는 다시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쟁점보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다만 의무 매입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 변함 없다는 정도의 입장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께서 이미 23일 본회의(3월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처리 시점은 불변”이라고 못박은 뒤 “저희가 초과생산량 3~5%, 가격 하락폭 5~8%에 더해 쌀 재배면적이 늘어날 경우 의무 매입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포함해

대폭 의장 의견을 수용했는데, 계속 양보하고 여당은 여전히 거부권만 믿고 가겠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에 목매달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라며 “여러 가지

로 봤을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오매불망 기다리며 자신들이 주도하는 중재안이나 타협을 전혀 구상하지 않는 정부여당으로 보여질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진표 의장은 “어려운 정치 현안이 많은 국회지만, 그래도 경제문제 민생문제

를 위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양곡관리법도 좀 타결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여야 합의의 도출을 주문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미뤘고, 중재안을 제안했다.

당초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또는 전년대비가 격 하락이 5% 이상이면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는데, 김 의장은 쌀 초과 생산량은 3~9%로, 가격 하락 폭은 5~15%로 요건을 완화한 중재안을 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의무매입 조항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중재안을 거부한다면 2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정안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이재명 곧 기소... 민주 ‘당헌 80조’ 논란 재점화

### 이상민 “선당후사... 정리 필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헌 80조’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적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하지만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면 서당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지는 의견이 나오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했고, 이에 당 지도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발을 뺀 상황이다.

비명계의 반발에 따라 당헌 80조 삭제 검토는 중단했지만, 친명계에서는 이 대

표가 기소된다고 해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사퇴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이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신변에 대한 거취 정리가 빨리 필요하다”며 이 대표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갖추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것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의견 충돌이 있으니 이걸 수습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정의, 이태원 유가족 만나 “특별법 제정” 약속

정의당은 20일 이태원 참사유가족협의회를 만나 특별법의 여야 합의 도출과 독립 조사기구 및 국회 재난안전특위 신설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문회에서) 경찰이 헬러워 데이에 몰린 인파에 따른 사고위험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참사 당일 사태를 수습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책임자들의 목과할 수 없는 위증도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모두 국회가 풀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 분들의 일관된 요구는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라며 “참사에 대한 책임이 쪼개질 수

없듯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쪼개지거나 덧칠될 수 없다. 정의당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국회 재난안전특위 신설 등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3대 대책 실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유가족협 대표는 “특수본과 국정조사 실시를 했지만 밝혀진 것이 꼬리 자르기 수사와 시간 때우는 정쟁”이라며,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있었는데 아이들을 후송하지 않은 이유, 중수본이 늦게 설치된 이유, 참사 이후 유가족들을 분리시킨 이유, 모든 것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돼서 유가족들이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주,尹 ‘굴욕외교’ 시민사회와 연대 대응

### “이번 주말 집회 조율 중” 박진 탄핵소추안도 검토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대외 외교와 관련해 ‘대일 굴욕외교’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에서 성과로 포장하고 있어 앞으로 시민사회와 연대해 계속 협력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는 기조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수석 대변인은 시민사회 연계 대응 방안 대해 “이번 주말에도 여러 집회가 예정된 것으로 아는데, 시민사회 쪽에서 민주당 참여를 요청 중”이라며 “관련한 여러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 발언 중 ‘헌법상 책임’과 관련한 언급이 나온 게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선 “확대 해석”이라며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과 한일 정상회담 등 대외 외교 정책의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외외교대책위원회 위원

장인 김상희 의원은 이날 박 장관 탄핵안 추진 여부에 대해 “당에서 곧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내부에서도 요청이 있고, 지난 토요일 집회 이후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21일 소집 요구와 더불어 고강도 조치 등도 예고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방일 중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의 문제가 정상회담 등에서 다뤄졌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이라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국민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등 문제 관련 “일본은 언론과 장관이 나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애써 감추는 이유가 뭐냐”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땀땀하다면 일본 정

부에 왜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 못하냐”라며 “굴욕외교를 절대 좌시할 수 없고 민주당은 운영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진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을 ‘외교 참사 3인방’으로 지칭하면서,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와 한미일 신냉전 획책을 규탄하는 교수·연구자 단체 및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신(新)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였다”며 “이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본의 입장만을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인 강제 동원 관련 해법에서 이미 예견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회는 이번 외교 참사의 주무 장관 박진을 탄핵하라”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이해 한일 양국 정부가 자행하는 선언의 왜곡을 저지하고, 한일 시민사회와 미래 세대가 새로운 평화연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尹 대통령 “봄철 산불·가뭄 문제, 예방·대응에 총력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미국 살리코넬리은행(SVB) 폐쇄 등 국제적 금융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만나 “금년 SVB 사태를 포함해 대외 금융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봄철 산불과 가뭄과 관련, “관계기관이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 피해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